

민주, 잼버리 파행 사태에...尹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대통령, 국민과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부모에 사과해야” “잼버리 대회서도 컨트롤타워 부재...한 총리 책임져야” “자체·감사원 감사에 의문...국회서 원인과 책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정부지원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여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파행사태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장은 “먼저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들,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잼버리 파행은 무능·무대책·무책임이라는 윤 대통령의 '3무' 국정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잼버리 개막 이후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어김없이 '전 정권'을 소환했다”며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과 경평 끝에 새만금을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다”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장은 “조직위원장 5명 중 실무 책임 부서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전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 매립과 조성 등 인프라를 닦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실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와 안전 점검이 주된 과제였다. 영국과 미국이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인 폭염과 위생 대책이 어디에 해당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부장은 정부 지원을 총괄한 한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에게는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

인 총리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이태원참사와 궁평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여가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차피 없애 여가부에겐 책임을 묻지 말고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이 한 총리가 책임질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장은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은 신속 효율을 내세워 자체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그러나 잼버리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 것인지, 이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처럼,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은폐하며 '전 정부' 전라북도 '새만금' 등 엉뚱한 곳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뻔하다”며 “이번 잼버리 실패를 교훈 삼아 부산 엑스포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은) 정말 염치가 있다면 변명과 남탓으로 일관하지 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전라북도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그는 “잼버리 사태를 포함한 국가 망신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정된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다.

김 수석부장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더라도 야당 주도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뜻을 내비쳤다가 거둬들었는데 여당이 자주 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국정의 동반자로서 이럴 때 국회가 나서도록 여당이 먼저 제안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변용일 기자

여당 “잼버리 담당자 철저히 수사해야...어떤 성역도 없어야”

“1100억 어디로 사라졌나...이권 카르텔 없었나”



국민의힘은 12일 준비 미흡 논란 등이 빚어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관련된 모든 담당자 한명 한명에 이르기까지 단순 문책을 넘어, 공직 감찰과 감사원 감사, 강제수사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를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단단히 고쳐야 하는 엄청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25회 잼버리가 혼돈으로 시작했으나 정부의 일사불란한 대응과 범국민적 지원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호평 속에 유종

의 미를 거뒀다”면서도 “이제 대한민국 자화상을 들여다보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새만금 잼버리는 대표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잼버리가 왜 총체적 부실 속에서 시작됐는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남겨진 숙제”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성역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목소리”라고 전했다.

그는 “잼버리에 사용하겠다고 편성된 국민혈세 1100억원은 어디로 사라졌나”라며 “조직위원회와 전북도, 부안군 담당자 등은 6년 동안 총예산의 74%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운

영사업비로 사용하고, 99회나 해외 출장을 나다니며 무엇을 준비했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부실 공사와 납품 물품들, 아이들에게 제공된 썩은 달걀에 이르기까지 전북도 입찰 담당 공무원들과 공사 및 물품 등을 수수한 지역업체 간 이권 카르텔은 없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각의 주장대로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11조원에 달하는 사회기반 시설(SOC) 예산만 빼먹고 잼버리는 방치한 것은 아닌지 미스터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가 수많은 형세를 지원했음에도 지난해 9월까지 기본적 시설 설계도 확정되지 않았다. 개막 1년 전인 지난 2월까지 공사 설치율이 5%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잼버리 준비는 지난 6년간 어떤 준비도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만 증발시키면서 방치됐다”며 “이 와중에 전북도는 추가 예산을 세 차례나 요청했고, 지난 4-7월 증액된 금액만도 152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어쩌면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를 향해 “면피를 위해 잼버리 기간 내내 정쟁만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서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서 ‘일 오염수 대책위’ 발대식 진행 나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 저지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는 1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당별 발대식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부산과 전남, 제주에서 발대식을 연다. 이어 광주(13일), 경남(14일), 전북·충남(16일), 대구·경북·인천(17일), 서울·경기·대전(18일), 세종·충북(19일) 등에서 같은 행사가 예정돼 있다.

대책위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오염수 방류 흐름에 대비해 전국적인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시도당 및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하고,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동참한 UN인권이사회 진정에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등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 제기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인을 괴롭히는 국제적 범죄이자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17개 시도당이 후쿠시마 방류 저지를 위한 주요 거점이 되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우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집행위원장, 어기구·정춘숙 공동위원장, 양이원영 간사, 김성환 전략기획본부장, 이용순 국제협력본부장, 유정주 국민홍보본부장, 이수진 연대사업본부장,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을 각 시도당 발대식에 배치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